

2019 국회8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9.5.4 시행)

01.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ㄱ)은(는) 정부업무, 업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서비스 요소, 데이터와 응용시스템의 실행에 필요한 정보기술, 보안 등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연계한 체계로서 정보자원관리의 핵심수단이다. (ㄱ)은(는) 정부의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강화, 정보자원 중복투자 방지, 정보화 예산의 투자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한다.

- ① 블록체인 네트워크
-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 ③ 제3의 플랫폼
- ④ 클라우드-클라이언트 아키텍처
- ⑤ 스마트워크센터

[답] ② 제시문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개념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전자정부법 제2조에 의하면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구축하여야 한다.

- ☑ ① [X] 블록체인 네트워크 :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망으로 출발한 개념으로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
- ③ [X] 제3의 플랫폼 : 서버, 스토리지 등 전통적인 ICT 산업인 제2플랫폼과 대비되는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소셜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플랫폼
- ④ [X] 클라우드-클라이언트 아키텍처 : 인터넷 상에 자료를 저장해 두고,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⑤ [X] 스마트워크센터 : 정부가 2010년 가동한 공무원 원격 근무 시설로 여러 정보통신기기를 갖추고 있어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가 없는 유연근무시스템 중 하나

02.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중 강제배분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첫머리 효과 ㄴ. 집중화 경향
ㄷ. 엄격화 경향 ㄹ. 선입견에 의한 오류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답] ③ 강제배분법은 등급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 놓고 강제로 할당하는 평정방법으로 중간점수로 몰리는 집중화나 너무 그렇게 대부분 후한점수를 주는 관대화, 대부분 낮은 점수를 주는 엄격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다.

- ☑ ㄱ [X] 첫머리효과는 근접오류 또는 시간적 오류로 최근에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사건이나 실적에 의하여 평가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독립된 평가센터의 설치, MBO평정법, 중요사건기록법 등이 있다.
- ㄷ [X] 선입견에 의한 오류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한 상동적 오류(stereotyping)로 이를 방지하려면 출신이나 신상을 밝히지 않는 방법이 있다.

● 근평의 오류와 방지법

오류	개념	방지방안
연쇄효과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나 전반적인 (막연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착오	강제선택법
시간적 오차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접 오류	목표관리법 중요사건기록법
집중화의 오차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	강제배분법
관대화의 오차	실제보다 너그럽게 후한 평정을 하는 것	강제배분법
규칙적 오차	지속적으로 과대 or 과소평정 ↔ 총계적 오차 (불규칙)	
논리적 오차	평정요소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한 오류	
상동적 오차 (stereotyping)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선입견·고정 관념에 의한 오차	
피그말리온효과	자기충족적 예언효과	

03.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②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③ 준정부기관은 총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례로는 도로교통공단이었다.
- ⑤ 공기업의 기관장은 인사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없으며 관할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는다.

[답] ④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교육,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안전시설 점검 등 정부의 공적사무를 대리인자격으로 위탁받아 처리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 ☑ ① [X] 정부기업은 정부부처형 공기업을 말한다.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기관의 성격도 정부조직이고 직원들의 신분도 공무원이다.
- ② [X] 국가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지방공기업은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으며,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 ③ [X] 정원이 50명 이상인 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고 그 중 공기업은 시장성이 커서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

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 ⑤ [X] 공기업의 기관장은 감독관청의 감독과 통제를 받지만, 이사회 의결로 예산이 확정되는 등 조직, 인사, 예산 운영 등에 있어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다.

● 공공기관의 유형과 구분

공기업	시장형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공항공사(인천국제, 한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주) 등 5개 발전회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주)강원랜드 등
	준시장형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위탁집행형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제정정보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기타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발전재단 등	

04.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ㄱ. 기업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접목하려는 노력이다.
- ㄴ. 정부 내의 관리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규칙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 ㄷ. 거래비용이론,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 ㄹ.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통해 일선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 ㅁ.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답] ③ ㄱ, ㄷ, ㅁ만 옳다.

- ☑ ㄱ [O]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이후 행정국가의 폐단으로 나타난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나 기업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도입·접목하려는 행정개혁운동이다.
- ㄴ [X] 정부 내의 관리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규칙중심의 통제나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성과를 중시한다.
- ㄷ [O] 신공공관리론은 기본적으로 거래비용이론,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등 시장경제학적 관점을 공공부문에 응용하려는 시도이다.
- ㄹ [X]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보다는 자율과 성과, 책임을 중시한다.
- ㅁ [O] 시장논리에 따라 성과와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

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책임성이나 대응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05. 행정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사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심사의 결정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 ②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며 그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④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 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답] ① 소청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청심사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의견이 나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결정한다.

- ☑ ② [O] 소청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O]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인사기관인 인사혁신처 소속이며 그 위원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보한다.
- ④ [O] 소청심사도 일종의 특별행정심판이므로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06.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등의 추진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현재 운영 중인 것은?

- 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② 자치분권위원회
- ③ 지방분권추진위원회
- ④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⑤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답] ② 박근혜정부시절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되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문재인정부 들어 2018.3 자치분권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위원회는 5년간 존속하는 한시(일몰)조직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1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에는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의 당연직 위원이 포함된다.

● 지방분권추진기구(대통령직속)의 변천

정부	근거 법률	추진기구
김대중	중앙행정권한이 지방이양 촉진법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노무현	지방분권특별법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이명박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박근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자치분권위원회

07.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획 예산제도(PPBS)는 기획, 사업구조화, 그리고 예산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 ② 계획 예산제도(PPBS)의 단점으로는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되고 전문화되어 외부통제가 어렵다는 점과 대중적인 이해가 쉽지 않아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있다.
- ③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정부의 지출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최초의 예산제도로서 지출대상별 통제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지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다.
- ④ 성과 예산제도(PBS)는 사업별, 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하여 행정통제를 합리화할 수 있다.
- ⑤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답] ⑤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을 사업이 아닌 품목, 즉 지출의 대상이나 성질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사업의 목적이나,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 ② 대표적인 합리모형에 해당하는 계획예산제도(PPBS)는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하향적)되고 전문화되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이나 정치인들의 참여가 어려워 외부통제가 곤란하다는 점과 지나치게 분석적이어서 대중적인 이해가 쉽지 않아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08. 다음 행정이론들을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가) 최소의 노동과 비용으로 최대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표준적 작업절차를 정하고 이에 따라 예정된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하려는 이론이다.
(나) 기존의 거시적인 제도나 구조가 아닌 개인의 표출된 행태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이다.
(다)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적·심리적 욕구와 조직 내 비공식집단 등을 중시하며, 조직의 목표와 조직구성원들의 목표 간의 균형 유지를 지향하는 민주적·참여적 관리 방식을 처방하는 이론이다.
(라) 시민적 담론과 공익에 기반을 두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 ① (가)-(나)-(다)-(라)
- ② (가)-(다)-(나)-(라)
- ③ (가)-(다)-(라)-(나)

- ④ (나)-(다)-(가)-(라)
- ⑤ (나)-(라)-(다)-(가)

[답] ② 행정이론은 가-다-나-라 순으로 발전하였다.

- ☑ (가) 과학적 관리론 (1910년대초반)
- (나) 행태론 (1940년대중반)
- (다) 인간관계론 (1930년대)
- (라) 신공공서비스론 (1990년대후반)

09.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로는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 ② 정부는 성과평가에 있어서 재무적 관점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고객의 관점을 중요한 위치에 놓는다.
- ③ 학습과 성장의 관점은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이 큰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 ④ 업무처리 관점은 정부부문에서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과정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
- ⑤ 고객 관점은 BSC의 4가지 관점 중에서 행동지향적 관점에 해당한다.

[답] ⑤ 재무적관점과 고객관점은 가치를 지향하는 상부구조관점에 해당하고, 프로세스관점과 학습성장관점은 하부구조관점으로 행동관점에 해당한다.

☑ ④ [O] 업무처리 관점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과정 등 행정의 전반적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의 시민참여, 적법적 절차,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선 구조, 공개 등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 균형성과관리(BSC)의 관점과 요소

관점(지표)	특성	내용(예)
재무적 관점	민간부문에서 중시하는 전통적인 후행지표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차이 등
고객 관점	공공부문이 중시하는 대외적 지표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고객의 증감 등
프로세스(절차) 관점	업무처리관점 과정중심 지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적법적 절차, 커뮤니케이션(소통) 구조 등
학습과 성장 관점	미래적 관점의 선행지표	인적 자원의 역량, 지식의 축적, 정보시스템 구축, 학습동아리 수, 제안건수, 직무만족도 등

10.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ㄱ)은 밀러(Gerald J. Miller)가 비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예산에 적용하여 1991년에 개발한 예산이론(모형)이다.
(ㄱ)은 독립적인 조직들이나 조직의 하위단위들이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조직의 예산결정에 적합한 예산이론(모형)이다.

- ① 모호성 모형
- ② 단절적 균형 이론
- ③ 다중합리성 모형
- ④ 쓰레기통 모형
- ⑤ 무의사결정론

[답] ① 제시문은 밀러(Miller)가 제시한 모호성 모형(ambiguity model)에 대한 설명이다. 모호성 모형은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대학조직), 은유와 해석의 강조, 제도와 절차의 영향(강조)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Miller는 의향의 모호성, 이해의 모호성, 역사의 모호성, 조직의 모호성 등을 전제로, 예산결정은 해결해야 할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결정에 참여해야 할 참여자, 결정의 기회 등 결정의 요소가 유연히 서로 잘 조화되어 합치될 때 이루어지며 그렇지 않을 때는 예산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④ [X] Miller의 모호성모형은 쓰레기통모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전제와 특징이 쓰레기통모형과 유사하고 또 모호성모형을 쓰레기통모형과 동일시하는 입장(신무섭)도 있지만 제시문에 Miller라는 주장학자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Miller의 모호성모형이 맞다.

11.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방식에는 합병, 일부사무조합, 도시공동체가 있다.
- ②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및 행정서비스의 형평적 배분을 도모한다.
- ③ 광역행정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 ④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해소와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⑤ 행정협의회에 의한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동등한 지위를 기초로 상호협조에 의하여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답] ① 광역행정의 방식 중 합병은 통합방식에 해당하지만, 일부사무조합, 도시공동체는 통합이 아니라 연합방식에 해당한다.

● 광역행정방식의 유형

공 동 처 리	사무위탁	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
	행정협의회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적 업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 법인격이 없고 구속력(강제력) 없음
	일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연 합	사무조합	규약(계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체 (법인격이 있으며 특별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짐)
	단체연합체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단체인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방식
	도시공동체	기초자치단체인 시(市)들이 광역행정단위를 구성하는 방식
통 합	복합사무조합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몇 개의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체
	합병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법인격을 통합시켜 광역단위의 새로운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 창설(통폐합)
	흡수통합	하급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지위를 상급자치단체가 흡수하는 방식
	전부사무조합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모든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법인체(= 사실상 합병)

12. 현재 행정각부와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ㄱ. 산업통상자원부 - 관세청
- ㄴ. 행정안전부 - 경찰청
- ㄷ. 중소벤처기업부 - 특허청
- ㄹ. 환경부 - 산림청
- ㅁ. 기획재정부 - 조달청
- ㅂ.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 ⑤ ㄴ, ㅁ, ㅂ

[답] ⑤ ㄴ, ㄷ, ㅁ만 옳다.

☑ ㄱ [X]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외청이다.
 ㄴ [O] 경찰청과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소속 외청이다.
 ㄷ [X]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외청이다.
 ㄹ [X]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외청이다.
 ㅁ [O]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외청이다.
 ㅂ [O]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외청이다.

13. 킹던(John Kingdon)의 정책창 모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ㄱ. 방법론적 개인주의 ㄴ. 쓰레기통 모형
- ㄷ. 정치의 흐름 ㄹ. 점화장치
- ㅁ. 표준운영절차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ㄷ
- ⑤ ㄴ, ㄷ, ㄹ

[답] ④ ㄴ, ㄷ, ㄷ만 옳다.

- ☑ ㄱ [X] 킹던(J.Kingdon)의 정책창 모형은 집단차원의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한 모형으로 방법론적 개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 ㄴ [O] 킹던(J.Kingdon)의 정책창 모형은 마치(J.G.March) 등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 ㄷ [O] 킹던(J.Kingdon)의 정책창 모형은 상호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흐르는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여론의 변화, 정권의 교체 등)이 어떤 계기로 서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된다고 본다.
- ㄷ [O] 정권의 교체와 같은 정치적 사건이나 문제의 발생과 같은 극적 사건을 점화장치(triggering device)라고 한다.
- ㄹ [X] 킹던(J.Kingdon)의 정책창 모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문제, 정치, 정책)가 연관성 없이 흘러 다니다가 우연한 점화제기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므로 정해진 루틴(매뉴얼)이나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한 결정과는 거리가 멀다.

14. 다음 글의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ㄱ)은(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 예산원칙 중 (ㄴ)의 예외에 해당한다.

- | | |
|-----------|---------|
| (ㄱ) | (ㄴ) |
| ① 수입금마련경비 | 통일성의 원칙 |
| ② 수입대체경비 | 통일성의 원칙 |
| ③ 수입금마련지출 | 한정성의 원칙 |
| ④ 수입대체경비 | 한정성의 원칙 |
| ⑤ 수입금마련지출 | 통일성의 원칙 |

[답] ② (ㄱ)은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수입대체경비를 말하며,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지출할 수 있으므로 (ㄴ)은 전통적 예산원칙 중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15.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된다.
- ②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회 소속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례로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있다.
- ④ 실, 국, 과는 부처 장관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계선 기능을 담당하고, 참모 기능은 차관보, 심의관 또는 담

당관 등의 조직에서 담당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답] ①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조직에 해당하고 직원들의 신분도 공무원이지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6.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ㄱ. 행정통제는 통제시기의 적시성과 통제내용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ㄴ. 옴부즈만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책임 추궁의 창구역할을 하며 입법·사법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 ㄷ. 외부통제는 선거에 의한 통제와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를 포함한다.
- ㄹ. 입법통제는 합법성을 강조하므로 위법행정보다 부당행정이 많은 현대행정에서는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

- ① ㄱ, ㄴ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ㄷ
- ⑤ ㄴ, ㄷ, ㄷ

[답] ③ ㄱ, ㄴ, ㄷ만 옳다.

☑ ㄷ [X] 합법성을 강조하므로 위법행정보다 부당행정이 많은 현대행정에서는 효율적인 통제가 어려운 것은 입법통제라기 보다는 사법통제이다.

17. 국세이며 간접세인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자동차세	ㄴ. 주세
ㄷ. 담배소비세	ㄹ. 부가가치세
ㅁ. 개별소비세	ㅂ. 종합부동산세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ㄷ
-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ㅁ
- ⑤ ㄷ, ㄷ, ㅁ

[답] ④ ㄴ, ㄷ, ㅁ만 국세이면서 간접세에 해당한다.

☑ ㄱ [X] 자동차세는 간접세이면서 직접세에 해당한다.
ㄷ [X] 간접세에 해당하지만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다.

우가 많으며, 점증모형은 목표달성의 극대화보다는 정치적 지자나 동의의 극대화를 최우선시한다. 정책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최선의 정책으로 평가하는 모형은 합리모형에 해당한다.

21. 우리나라 공무원의 승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 60%, 경력평정 40%를 고려하여 작성된다.
- ②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이 승진하려면 7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 ③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 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 ④ 공개경쟁승진은 5급으로의 승진에 적용되며, 기관 구분 없이 승진자격을 갖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 ⑤ 특별승진은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시행자, 명예퇴직자, 공무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답]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80%, 경력평정점 20%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 ☑ ② [O] 최저승진소요연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 ③ [O] 근속승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 ④ [O] 공개경쟁승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 ⑤ [O] 특별승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22. 갈등의 조성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표면화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정보전달통로를 의식적으로 변경시킨다.
- ②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상위목표를 제시한다.
- ③ 상황에 따라 정보전달을 억제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한 정보를 전달한다.
- ④ 조직의 수직적·수평적 분화를 통해 조직구조를 변경한다.
- ⑤ 단위부서들 간에 경쟁상황을 조성한다.

[답] ② 상위목표 제시는 갈등의 조성이 아니라 해소전략이다.

● 갈등해소전략과 조성전략

갈등해소전략	갈등조성전략
① 문제의 공동해결	① 정보 및 권력의 재분배
② 상위목표 설정·제시	② 구조적·제도적 갈등조장 방안
③ 집단간 상호의존성 감소	③ 충격요법적 방법
④ 자원의 확충	④ 인사정책적 방법
⑤ 정원시스템 : 공식경로를 통	

한 고충 해결 ⑥ 공식적 계층제 또는 권위에 의한 방법 : 상급자의 권한 발동에 의한 해결방법으로 명령과 강제 수반, 가장 원시적이고 최종적인 수단 ⑦ 상호작용의 촉진 ⑧ 평가기준과 보상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의 개선 ⑨ 조직개편(구조적 요인의 개편)이나 갈등집단의 통폐합 ⑩ 공동경쟁대상(공동의 적) 설정 ⑪ 기타 방안 : 리더십의 발휘, 의사전달의 촉진, 인사교류 및 공동교육훈련, 이념의 제시, 조정기구에 의한 방법, 타협과 완화, 갈등상황에의 적응 유도 등	⑤ 경쟁상황의 창출
---	------------

23.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1조, 「지방공무원법」 제1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행정가치로 옳은 것은?

- ① 합법성과 형평성
- ② 형평성과 공정성
- ③ 공정성과 민주성
- ④ 민주성과 능률성
- ⑤ 능률성과 합법성

[답] ④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민주성과 능률성을 공통의 기본가치로 천명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법(제1조)의 기본가치 :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법(제1조)의 기본가치 : 민주성, 능률성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제1조)의 기본가치 : 민주성, 능률성, 균형성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재정법(제1조)의 기본가치 : 효율성, 성과성, 투명성, 건전성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헌장의 기본가치
창의성, 다양성, 투명성, 전문성, 공익성, 공정성, 민주성

24. 정책참여자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ㄱ. 정책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이슈네트워크와 공통점을 가진다.
- ㄴ. 다원주의에서의 정부는 집단들 간에 조정자 역할 또는 심판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ㄷ.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 간의 상호의존성이 낮고 불안정하며, 상호간의 불평등 관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 ㄹ. 국가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를 보장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답] ③ ㄴ, ㄷ만 옳다.

- ☑ ㄱ [X] 정책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슈네트워크와 차이점이 있다.
- ㄴ [O] 다원주의에서의 정부는 집단들 간에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 또는 수동적인 심판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ㄷ [O]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 간의 상호의존성이 낮고 불안정하며, 상호간의 불평등 관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 ㄹ [X] 국가조합주의는 이익집단과 국가간 공식합의를 토대로 국가가 이익집단을 억압하며 권위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므로 이익집단의 자율성 능동적 참여는 제한된다.

● 이슈네트워크와 정책공동체의 비교

차원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구성원	참여자수	매우 제한될 일부 집단은 의식적으로 배제될	다수
	이익유형	경제적 및/또는 전문적 이해가 지배적임	다양한 범위의 이해관계를 모두 포함
통합	상호작용빈도	정책이슈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모든 집단이 빈번하고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함	접촉빈도와 강도가 유동적임
	연속성	구성원, 가치, 결과가 장기간 지속됨	접근의 변화가 매우 유동적임
	합의	모든 참여자가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결과의 정통성을 수용함	일정한 합의가 있으나 갈등이 역시 존재
자원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함; 관계는 교환관계가 기본임	일부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지만 제한적 합의관계가 기본임
	참여조직 간 자원배분	계층적; 지도자가 구성원에게 자원을 배분할 수 있음	구성원을 규제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의 배분이 다양하고 가변적임
권력		구성원간 균형이 이루어짐. 한 집단이 지배적일 수	자원보유, 접근성의 불균등을 반영하여 권력이 균등하지 않음.

있으나, 공동체가 유지하려면 포지티브섬 개념	권력은 제로섬 게임(승자와 패자가 있음)
--------------------------	------------------------

25.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력문화적 접근법은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 ②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등이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 ③ 제도적 접근법은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를 대표적인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 ④ 체제론적 접근법은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행태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공무원 부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 ⑤ 도덕적 접근법은 개인의 성격 및 습성과 윤리 문제가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답] ①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도덕적 접근이다.

● 부패의 유형

거래형 부패	뇌물 받고 혜택 부여 (외부부패)
사기형 부패	공금횡령, 회계부정 (내부부패, 비거래형부패)
일탈형 부패	우발적·개인적 부패 (돈받고 단속 눈감아주기)
제도화된 부패	급행료·커미션이 당연시되는 문화 (관행적·체제적 부패)
권력형 부패	상층부의 정치권력을 이용한 막대한 부패
생계형 부패	하급관료(민원부서)들의 작은 부패
백색 부패	구성원 대부분이 처벌을 원치 않는 선의의 부패
흑색 부패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부패로 법률에 규정 가능
회색 부패	처벌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부패로 법률보다는 윤리강령 등에 규정

● 부패의 접근법

기능주의적 분석	부패란 국가발전이나 산업화의 부산물, 순기능 인정
후기기능주의	기능주의에 대한 반발로 부패란 자기영속적인 것
구조적 분석	공직사유관 등 공무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가 부패의 원인
제도적·거시적 분석	법과 행정구조·제도의 결함과 미비가 원인
사회문화의 환경적 분석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
정치경제학적 분석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
도덕적 접근법	부패는 개인의 윤리의식, 자질, 도덕심의 부족 탓
체제론적 접근법	부패는 문화, 제도결함, 구조적 모순 등 복합적인 현상